

사회자본론의 시각에서 본 시민참여와 호혜성의 관계: 부산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류 태 건

국문요약

사회자본론의 관점에서 시민참여는 사회자본의 한 구성요소이기도 하고 또 다른 구성요소인 호혜성을 창출하는 근원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자본론의 시각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해 시민참여 및 호혜성의 유형별 현황과 시민참여 유형들의 호혜성 유형들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우선 시민참여는 사회 참여와 정치참여의 2개 영역으로 대별하여 4가지 유형의 사회참여와 5가지 유형의 정치참여에 대해, 그리고 호혜성은 4가지 유형의 '포괄적 호혜성'에 대해 조사, 분석했다.

기술통계를 통해 시민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백분위 값으로 환산할 때 사회참여는 12.3점, 그리고 정치참여는 수년 주기로 한번 행해지는 투표참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의 참여수준이 12점을 기록해, 부산시민의 참여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포괄적 호혜성의 수준을 백분위 값으로 환산하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움 활동 50.6점, 도덕의식 84.3점, 관용성 61점, 그리고 공공정신 65.8점으로서, 도덕의식 수준이 높은 가운데 여타 유형의 호혜성 수준은 보통 정도라 할 수 있다.

9가지 시민참여 유형들의 4가지 포괄적 호혜성 유형에 대한 영향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과격항의활동은 도덕의식, 관용성 및 공공정신 등 3가지 유형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도구적 단체 및 도구·표출적 단체(참여)는 공히 도덕의식과 관용성 2가지 유형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들 영향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민참여 유형은 4가지 일반화된 호혜성 유형에 대해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유의한 영향력이 없다. 과격항의의 간헐성과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시민참여가 호혜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오직 도구적 단체와 도구·표출적 단체의 도덕의식과 관용성에 대한 경우뿐이다. 결국, 이들 두 가지 시민참여 유형의 부정적 영향관계를 제외한다면 시민참여는 대체적으로 포괄적 호혜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주제어: 사회자본, 시민참여, 사회참여, 정치참여, 호혜성, 부산

I. 들어가며

본 연구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해 시민참여 및 호혜성의 유형별 현황과 시민참여 유형들의 호혜성 유형들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참여는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3A2033769).

정치학의 전통적인 연구주제로서, 시민참여의 범위와 효과에 대한 논란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엘리트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다원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등 주요 민주주의 모델들의 특성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이 되기도 한다(Held 2006). 전통적인 논란의 흐름 속에서, 근래에는 시민참여에 대한 기능적 내지 공리적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자본론의 시각에서 시민참여는 사회자본의 한 구성요소이기도 하고, 신뢰나 호혜성과 같은 사회자본을 창출하는 근원이기도 하며, 그리고 특히 호혜성은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유발하는 기반으로 간주된다(Putnam 1993a, 2000; Ostrom 1990; Newton 1997; Stolle 2009).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자본론의 시각에서 시민참여와 호혜성의 문제에 접근한다.

사회자본의 개념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나, Woolcock(1998: 153)은 선행 연구들¹⁾의 개념정의를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정의하여 사회자본이란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연결망)에 포함된 정보와 신뢰 그리고 호혜성의 규범”이라고 한다. 한편 Newton(1997)은 사회자본을 ① 규범과 가치, ② 네트워크(연결망), ③ 결과로서 생산된 집합적 자원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정의내릴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네트워크 접근법에 따르면, 시민참여의 네트워크는 신뢰와 협력을 창출해 내고(Tocqueville 1984; Mill 1910; Newton 1997 참조), 호혜성의 규범을 낳는다(Ostrom 1990: 206; Putnam 1993a: 173). 사회자본론에서 시민참여란 비정부·비영리부문의 시민사회가 정부부문에 관여하거나 시민사회 자체 내에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연계하는 것을 뜻하고, 시민참여의 네트워크는 그러한 관여나 연계의 기제를 말한다(Putnam 1993a: 173; 2000: 19, 290-291). 그리고 호혜성(reciprocity)은 편익의 교환을 뜻하는바, Putnam(1993a: 171-176)은 이를 균형적(balanced, specific)인 것과 포괄적(generalized, diffuse)인 것으로 구분한다. 균형적 호혜성은 등가의 편익을 동시에 교환하는 것을 말하고, 포괄적 호혜성은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는 제공한 편익에 대해 반대급부가 없거나 불균형하더라도 미래에는 틀림없이 보상받을 것이라는 상호간의 기대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교환관계를 말한다. Putnam은 특히 포괄적 호혜성 규범은 사회자본의 매우 생산적인 요소로서, 이 규범이 통용되는 공동체에서는 기회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억제해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 이러한 호혜성 규범이 시민참여의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된다는 것이 네트워크 접근법의 견해인 것이다. 그렇지만 호혜성은 주관적 현상이고 네트워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으로서 양자는 서로 다르며, 게다가 어떤 네트워크는 보다 넓은 사회의 사회자본을 저해할 수도 있는 까닭에(Putnam 2000: 362-363; Portes 1998: 15), 네트워크 효과는 경험적 연구의 문제로 남아있다(Newton(1997: 583-584).

이러한 사회자본론의 문제의식과 접근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일차적으로 부산시민의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네트워크 참여(‘객관적 사회자본’)의 현황 및 포괄적 호혜성(‘주관적 사회자본’)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차적으로 이들 다양한 시민참여의 네트워크들이 포괄적 호혜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연구대상 지역을 부산으로 설정한 이유는 단순히 본 연구자의 거주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이다. 우리나라에

1) Coleman(1990: 302), Bourdieu(1992: 119), Burt(1992: 9), Loury(1992: 100), Putnam(1993a: 167), Portes(1995: 12).

지방자치제도가 제도입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들은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확충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Putnam(1993a: 183)의 주장처럼 “정치적 안정과 정부의 효율성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해 사회자본은 물적자본이나 인적자본 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지역발전에 있어서 사회자본이 갖는 중요성은 지역발전이라는 거시적 현상이 궁극적으로 공공재라는 사실에 있고, 사회자본은 지역의 공공재 생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사유재의 성격을 가지는 물적자본이나 인적자본과는 달리 사회자본 자체가 공공재라는 것이다(Putnam 1993a: 170; 성경룡 등 2012: 68-69). 이러한 견지에서 사회자본은 지역발전 내지 지역발전연구를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부산시의 시민참여와 호혜성의 수준은 어떠한가? 과연 시민참여 혹은 시민참여의 네트워크는 시민들의 호혜성 규범을 창출하는가? 창출한다면 시민참여는 사회적으로 아주 소중한 자본일 것이다. 호혜성이 결핍되면, 사회는 그야말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상태’인 홉스의 자연상태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 제II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시민참여와 호혜성의 개념, 종류 및 효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제III장에서는 경험적 조사연구의 방법을 모색하며, 제IV장에서는 조사결과를 분석한 뒤, 결론을 맺는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시민참여

시민참여(civic/citizen participation/engagement)는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나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와 혼용되어 용어상의 혼란이 있다. 우선, 시민참여는 시민의 비정치적인 사회참여를 지칭하기도 하고(Campbell 2004, Theiss-Morse and Hibbing 2005 참조), 시민의 정치참여를 지칭하기도 하며(Arnstein 1969; 이승중 1993, 2006), 혹은 그 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박희봉 2006; 주성수 2006; Verba, Schlozman and Brady 1995; Putnam 1993a, 2000). 게다가 시민참여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협의는 정치참여, 광의는 정치참여와 여타 사회참여를 포괄하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배귀희·임승후 2009). 다음으로, 사회참여는 지역사회나 사회단체에의 참여를 지칭하거나(박영도 2007; 윤상철 2007), 정치참여와 사회단체참여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거나(박희봉 등 2009), 특히 여성이나 노인 관련 연구들에서는 이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활동에의 참여를 통칭하기도 한다(심영희 1992; 이소정 등 2007). 다만, 정치참여는 일반시민이 정부의 구성이나 정책에 관여하는 활동을 지칭한다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다.

이러한 용어상의 혼란은 연구대상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사회’를 국가(state) 또는 정치체(body politic)와 대비되는 시민사회(civil society)로 보느냐 아니면 정치·경제·문화 등의 하위체계를 가진 광범위한 사회체계(social system)로 보느냐에 따라, 시민의 사회참여는 국가와 대비된 시민사회에의 참여에 한정되거나 혹은 정치참여를 비롯해 여타 모든 사회적 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들 용어를 사용한다. 시민참여, 사회참여 및 정치참여라는 용어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구분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때 국가는 정부부문, 시장은 영리부문, 시민사회는 비정부·비영리부문으로 특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부·비영리부문인 시민사회가 국가 혹은 정부부문에 관여하는 것을 정치참여라 하고, 시장에 관여하는 것(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시민단체의 기업활동 감시·비판 등)을 경제참여라 칭하며, 시민사회 자체 내에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동하는 것을 사회참여라 칭하고, 이러한 정치참여, 경제참여, 사회참여를 통칭하여 시민참여라 한다.

1) 사회참여: 자원결사체

비정부·비영리부문의 시민사회 내에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연계를 맺는 네트워크로서는 1차집단 차원의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같은 비공식적인(informal) 것들도 있겠으나, 2차집단 차원의 가장 일반적인 네트워크는 공식적·준공식적 조직을 구성하는 자원결사체들이다. 자원결사체의 개념, 종류 및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1) 자원결사체의 개념과 종류

자원결사체(자발적 결사체. voluntary association)는 여타 사회집단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 Sills(1968: 362-376)에 의하면 자원결사체란 사람들로 조직된 단체로서 (1) 구성원들의 어떤 공통된 이해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형성되고 (2) 성원자격이 강제적 혹은 생득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자발적이고 (3) 국가와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단체이다. 이는 광의의 개념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모든 비국가적 단체들 즉 교회, 회사, 노조, 정당, 재단, 사립학교, 협동조합 등도 자원결사체에 포함된다. 그런데 Sills는 다음의 2가지 기준을 덧붙여 자원결사체 개념을 더욱 협의로 규정하고, 이 협의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4) 조직의 주활동이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 즉 성원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되지 않고 (5) 무급의 자원자가 참여자의 다수일 것. 이 협의의 규정에 따르면 생계유지가 주활동인 회사나 협동조합, 무급 자원자가 소수인 재단, 사립학교 등이 자원결사체에서 제외된다.

Sills의 개념규정을 참고해, 본 연구에서는 간략히 자원결사체란 ‘구성원들의 공통된 이해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비정부·비영리 민간단체’라고 이해한다.

이렇게 자원결사체의 본질을 규정하더라도 그 외연의 분류는 간단하지 않다. 미국의 비정부·비영리부문 약 160만개 단체를 분석하면서 Salamon(1999: 21-22)은 그 종류의 다양성, 활동분야의 복잡성,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의 혼재, 조직규모의 다양성 등으로 인한 분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어쨌든, 자원결사체들의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활동영역에 따른 분류이다. Salamon & Anheier(1997: 69-81)는 국가 간의 비교연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국제기구나 국가기구의 분류체계를 검토해서 ‘비영리조직체 국제적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ICNPO)’를 시도했다. 이 분류체계에서 자원결사체는 문화와 오락, 교육과 연구, 건강, 사회서비스, 환경, 발전과 주거, 법률서비스·권익보호·정치조직, 자선·자원봉사, 국제활동, 종교, 직업단

체와 노조, 기타 등 12개 영역으로 분류된다. 한편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WVS)의 2005-2006 조사주기에서는 세계 각국의 자원결사체 활동을 종교·교회단체, 체육·오락단체, 예술·교육단체, 노조, 정당, 환경단체, 직업단체, 인도주의·자선단체, 소비자단체, 기타 등 10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조사했다. 그리고 한국의 통계청(2012)에서는 ‘사회단체’를 친목 및 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스포츠 및 레저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등 7가지로 분류해서 조사한다.

본 바와 같이 자원결사체의 영역별 분류체계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조사 연구에서는 2005-2006 세계가치조사의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 연고단체(동창회, 향우회, 종친회)를 이에 추가해 분류, 조사하고자 한다.

활동영역에 따른 분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구자들은 다양한 자원결사체들의 잠재적 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도 한다. van der Meer 등(2009)은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2002)의 자원결사체 목록을 바탕으로 취미단체(스포츠, 문화, 사회 단체), 이익단체(노조, 전문·직업, 소비자 단체) 및 활동가 단체(환경, 인권·평화 단체)로 구분한다. 그리고 Gordon & Babchuk(1959)은 일찍이 자원결사체를 그 기능적 특성에 비추어 표출적, 도구적, 도구-표출적 결사체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바 있다. 표출적 결사체란 그 조직 자체 내에서의 자기만족적인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흥미나 만족을 추구하는 결사체를 말한다. 취미나 친목단체가 이러한 결사체의 전형이다. 도구적 결사체는, 그 조직활동이 구성원들의 표출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도 있으나, 조직활동을 수단으로 하여 어떤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결사체를 말한다. 전문직 단체나 이익집단이 그 예이다. 그리고 도구-표출적 결사체는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뚜렷이 함께 가진 결사체이다. 예를 들어 금주단체나 재향군인회 등이 이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Gordon & Babchuk의 유형분류를 활용한다.

(2) 자원결사체의 기능

특히 토크빌(Tocqueville 1981)의 전통을 따르는 사회자본론자들에게 있어서 자원결사체는 민주적·협력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회자본을 창출하는 근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Putnam은 이러한 입장을 대표한다. Putnam(1993a: 89-91, 171-176; 2000: 337-341)은 우선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교환관계의 네트워크를 수평적(horizontal)인 것과 수직적(vertical)인 것으로 구분한다. 수평적 네트워크는 동등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행위자들을 연결시키고, 수직적 네트워크는 동등하지 않은 행위자들을 위계질서와 종속의 비대칭 관계로 연결시킨다. 수직적인 네트워크는 상호성 보다는 종속성으로 특징지어지고, 기회주의가 후견인(착취)과 피후견인(배반) 모두에게 가능성 높은 선택이 된다. 시민참여의 네트워크(networks of civic engagement)²⁾ 즉 자원결사체들은 수평적 상호작용을 대표하며, 만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상호기대를 전달할 수 있어 ‘포괄적 호혜성’과 관련된 강력한 규범을 만들어 낸다. Granovetter(1973)가 주장하듯이,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일차집단에서의 강한 유대(strong ties) 보다 자원결사체와 같은 이차집단에

2) 주민모임, 스포츠·레저·문화·사회봉사단체, 교회모임, 직업단체, 상조회, 계모임 등등의 사회적 연계 및 정당 활동이나 투표참여와 같은 정치적 연계(Putnam 1993a: 173).

서의 약한 유대(weak ties)가 공동체의 응집력을 유지하고 집단행동을 지속시키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 특정집단 내부로만 응집되는 강한 유대 보다, 약한 유대는 다른 집단의 성원들과 더욱 잘 연결시켜 준다. 다양한 사회적 균열을 가로지르는 약한 유대의 자원결사체들은 보다 넓은 범위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특히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결사체는 내부적으로 회원들 간에 협동의 습관과 정치참여, 신뢰, 호혜성과 같은 시민적 품성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심의의 장소로 기여할 수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이익표출과 이익집약을 향상시켜 민주적 정부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공헌한다. 다만 Putnam(2000: 337-341)은 자원결사체의 민주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자원결사체들 중에는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결사체도 있고, 이익단체들이 정부의 정책결정을 왜곡할 수 있고, 조직력이 강한 상층계급의 이익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이데올로기적 극단주의와 연계되어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해서 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을 약화시키고 시민참여에 대한 냉소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 게다가 자원결사체에 참여한다고 모든 사람들의 덕성이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Putnam(2000: 362-363)은 연계형 네트워크(약한 유대)와 결속형 네트워크(강한 유대)는 효과를 발휘하는 분야가 다르며, 대규모의 복잡한 현대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연계형 네트워크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자원결사체의 효과에 대한 Putnam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반론들도 있다. 첫째, 사회자본은 시민사회의 결사체 보다 공식적 정치제도에 배태되고 연계될 때 더욱 풍성해진다(Levi 1998; Rothstein 2005; Tarrow 1996). 둘째, 참여가 신뢰를 발생시킨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Uslander 2002; Stolle 2001; Delhey and Newton 2005). 셋째, 수평적 네트워크가 낮은 사람들에게 대한 일반신뢰를 높이거나(Inglehart 1999; Paxton 1999), 군대와 같은 수직적 조직이 효율적인 사회자본을 형성하기도 한다(Berman 1997a). 넷째, 규모가 크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는 약한 유대 혹은 연계형(bridging) 네트워크가 사회자본의 생성에 유용하나(Granovetter 1973; Burt 1992), 강한 유대 혹은 결속형(bonding)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사회자본이 출현하는 데 필수조건이다(Coleman 1988; Lin 2001).

이러한 주장과 반론을 고려해볼 때, 자원결사체의 효과는 결사체의 성격이나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보아 이론적·경험적 모호성 속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과 실증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우선 다양한 자원결사체의 유형을 분류한 뒤, 각 유형별로 호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정치참여

(1) 개념과 종류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는 어의 상 모든 사람의, 그리고 모든 종류의 정치활동을 포괄해야한다. 그런데 학술적 용어로서의 정치참여는 직업 정치인이나 공직자를 제외한 일반시민의 정치활동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들 사이에 별 이견이 없고, 다만 이러한 정치활동의 외연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우선 정치참여의 개념정의 몇 가지를 소개하면, “정부 공직자의 선출이나 정부의 정책에 영향

을 미치려고 행해지는 일반시민의 합법적인 행동”(Verba, Nie & Kim 1978: 1); “일반시민이...공공정책의 형성, 결정 및 집행의 과정에 관여하는 것”(Parry, Moyser & Day 1992: 16-17);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시민들의 행위”(Huntington & Nelson 1976: 3-15)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들 개념정의를 종합해보면, 정치참여는 ‘일반시민이 정부의 구성(공직자의 선출)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활동의 범위에서 Verba 등은 불법적이거나 의례적 활동, 지지활동이나 동원된 활동은 제외하나, Parry, Moyser & Day 그리고 Huntington & Nelson은 모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전자를 협의의 정치참여 후자를 광의의 정치참여로 볼 수 있다(이승중 1993: 76-77).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입장을 따른다. 즉 정치참여란, 의례성·자발성·합법성을 불문하고, 일반시민이 정부의 구성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이라고 이해한다.

시민의 정치참여는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까닭에, 연구자들은 정치참여형태들의 유형분류를 시도해왔으며 이는 연역적 분류와 귀납적 분류로 대별할 수 있다. 연역적 분류의 경우, Barnes, Kaase et al.(1979: 57-60)은 참여활동의 관습화 정도를 기준으로 관습적(conventional) 참여와 비관습적(unconventional) 참여로 분류하고, 김병준(1994: 446)은 참여활동의 제도화 여부를 기준으로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로 대별한다. 귀납적 분류의 경우, Verba & Nie(1972, 46-47)는 시민들이 통상 행하는 정치참여활동 13가지를 망라하여 조사한 뒤 통계적 요인분석 기법을 사용해 이 활동들을 투표참여, 선거활동, 공공활동 및 사적 접촉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귀납적 분류방법은 Milbrath & Goel(1977, 10-21)의 연구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Verba & Nie의 경우보다 정치참여활동의 범위를 넓혀 조사한 후 요인분석을 통해 투표참여, 정당 및 선거활동, 공공활동, 사적 참여, 항의활동, 통신활동 등 6가지로 유형화한다. 한편 Dalton(2008: 33-34)은 Verba & Nie의 4가지 유형에다가 ‘항의와 논쟁’ 및 ‘인터넷활동’을 덧붙여 6가지로 유형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Verba & Nie 및 Dalton의 분류체계를 활용한다.

(2) 기능

정치참여는, 사회참여와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자 자신에게는 내부효과, 외부 환경에는 어떤 외부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Putnam(1993a; 2000)을 통해 정치참여의 효과에 대한 사회자본론의 견해를 살펴본다. 그는 정치참여를 “시민참여의 네트워크”의 연장선에서 보면서, 정치참여 내지 시민참여의 효과에 대해서는 참여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Putnam(2000: 336-349)이 제시하는 정치참여의 긍정적 효과³⁾는 다음과 같다. 정치참여는 정치체제에는 외부효과 그리고 참여자 자신들에게는 내부효과를 초래한다. 외부효과로서, 정치참여는 정부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수요측면에서 시민들은 더 좋은 정부를 기대하며 정치적 관심과 요구를 정부에 표출하고, 정치지도자들의 권력남용을 감시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환기시킨다. 정부의 공급측면에서는 공직자와 시민 모두의 민주주의적 가치 확립을 통

3) 정치참여의 부정적 효과는 위에서 언급한 자원결사체의 부정적 효과와 같다.

해 대의정부의 성과를 높인다. 그러나 공공업무를 정치가나 세력가 혹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무관심이나 소외감은 정치를 그들의 것으로 만든다. 내부효과로서, 토크빌이나 밀의 견해에 따라, 시민들이 공공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집합적 이익이나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 반면, 공공업무에 참여하면 여러 사람의 이익을 중시하도록 요구받고 개별적 특수성과는 다른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받게 되어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리하여 정치참여는 구성원에게 협력의 습관과 공공정신(참여, 신뢰, 호혜성)뿐 아니라 공공생활을 함께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 업무능력을 배양한다. 그렇다고 시민참여가 민주주의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참여가 없는 정치는 일종의 국민투표 민주주의(plebiscitary democracy)로 전락할 수도 있다. 또한 풀뿌리 정치참여가 줄어들면 정치는 균형을 잃고 이데올로기적 양극단의 소수집단에 의한 ‘파당’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Putnam(2000: 152-166)에 따르면 이러한 정치참여 효과는 관습적 정치참여 유형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의 보편적인 정치참여 유형인 정치항의(political protest)는 관습적 정치참여의 대안이 아니라 보완이며, 시민사회의 활력과 자유의 요소이다. 이념과 지향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치항의 그 자체는 참여자에게 동질성을 강화시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사회자본을 창조하기도 한다. 게다가 정치항의 참여자들은 관습적 정치참여에도 보다 적극적이다.

간단히 말해 정치참여는 민주적 시민의 덕성을 함양하는 내부효과와 정부의 반응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외부효과를 가진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오직 정치참여의 내부효과로서 시민의 호혜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2. 호혜성

(1) 개념과 종류

영어 ‘reciprocity’는 연구자에 따라 ‘호혜성’ 또는 ‘상호성’으로 번역된다. 어의 자체로 호혜성(互惠性)은 상호성(相互性)의 긍정적 측면만을 뜻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양자를 동의어로 간주하면서 주로 호혜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Sahlins(1972: 191-196)에 의하면, 호혜성(reciprocity)이란 다양한 교환형태의 스펙트럼 상에 있는 모든 교환들(exchanges)을 포괄한다. 교환에서의 보답의 즉각성과 등가성, 그리고 교환의 물질적·비감성적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스펙트럼의 양극단과 중간점을 취해, 호혜성은 ‘포괄적(generalized)호혜성’, ‘균형적(balanced) 호혜성’ 및 ‘부정적(negative) 호혜성’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현실상의 교환들은 정확한 양극단과 중간점이 아닌 어떤 지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포괄적 호혜성이란 편익을 주고받는 거래 선상에서 이타적이라는 평판이 따르는 거래에 해당된다. 그 이념형은 말리노프스키가 “순수 선물”이라고 칭한 것이고, 다른 표현들로는 “공유”, “친절”, “공짜 선물”, “도움”, “관용”, “노블레스 오블리즈”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직접적인 물질적 보답을 바라는 것은 꼴사나운 짓이고 기껏해야 암묵적이다. 거래의 물질적 측면은 사회적

측면에 의해 억제된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상대방의 보답의 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보답은 시간적·양적·질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호혜성에 대한 기대는 일정하지 않다. 다만 공여자가 필요로 하거나 수혜자가 가능할 때에 보답을 해야 하는 포괄적 의무(diffuse obligation)를 과한다.

균형적 호혜성은 직접적인 교환과 관련된다. 균형적으로, 보답은 수혜물의 인습적인 등가물이고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다만 정해진 짧은 기간 내에 등가의 보답을 한다는 계약을 통해 좀 더 느슨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 균형적 호혜성을 지칭하는 표현은 “선물교환”, “상환”, “교역”, “매매” 등이다. 균형적 호혜성은 포괄적 호혜성에 비해 덜 인격적이고 보다 경제적이다. 교환의 당사자들은 뚜렷한 경제적, 사회적 이해를 가지고 서로 조용한다. 거래의 물질적 측면이 적어도 사회적 측면만큼 중요하며, 교환은 계산적이다. 상호관계는 한정된 시간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흡할 때 붕괴된다. 포괄적 호혜성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물질적 관계 보다 우세한 반면, 균형적 호혜성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물질적 관계의 여하에 달려있다.

부정적 호혜성은 처벌받지 않고 공짜로 얻으려는 것과 관련된다. 이를 나타내는 표현은 “값후려치기”, “도박”, “속임수”, “절도”, “강탈” 등이다. 부정적 호혜성은 가장 비인격적인 교환이다. 교환 당사자는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서 만나, 상대방의 손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속임수나 힘에 의한 착취나 강탈의 이기적인 혜택과 이에 대한 보답으로서 상응한 방법의 양값음이 교환된다. 포괄적 호혜성과 부정적 호혜성은 특히 도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고, 이들 양극 사이의 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거리이다.

한편 Keohane(1986: 4-8)은 호혜성을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되갚는 방식으로, 각 당사자의 행위는 상대방의 사전 행위를 조건부로 하는 대략적인 등가물의 교환들”이라고 규정한다. 호혜성 개념의 핵심은 조건성(contingency)과 등가성(equivalence)이다. 즉 호혜성은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고,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인(rough) 등가성에 입각한 교환을 말한다. 이러한 호혜성은 구체적 호혜성(specific reciprocity)과 포괄적 호혜성(diffuse reciprocity)으로 구분된다. 구체적 호혜성은 특정 당사자들 사이에 교환의 연속성(sequence)이 엄격히 한정된 상황에서 등가물을 교환하는 것이다. 교환관계에서 어떤 의무감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로 명백히 규정된다. 구체적 호혜성은 경제학이나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호혜성의 전형적인 의미이다. 포괄적 호혜성(diffuse reciprocity)은 등가성의 규정이 덜 명확하고 연속성이 덜 한정된 교환을 말한다. 이러한 교환관계에서는 의무감(obligation)이 중요하고, 보편적으로 수용된 행위기준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Putnam(1993a: 172, 미주 50)의 호혜성에 대한 개념, 분류 및 기능적 관점은 이상에서 살펴본 Sahlins와 Keohane, 그리고 이제 살펴볼 Axelrod에 의거하고 있다.

(2) 효과

균형적 호혜성 및 포괄적 호혜성은 게임이론이나 사회자본론 혹은 여타 사회이론에서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창출하고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게임이론을 먼저 살펴본다. ‘중앙권위체가 없는, 이기주의자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과연 어떤

조건일 때 협력행동이 나타날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Axelrod(2006)는 1984년 두 차례에 걸쳐 ‘컴퓨터 죄수의 딜레마 대회’를 개최했다. 제1회 대회에는 15개, 제2회 대회에서는 62개 전략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서 제출되었다. 제출된 전략들은 각각 다른 모든 전략들을 상대로 상호협력이나 배신을 선택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수없이 반복한 뒤, 주어진 보수행렬에 따라 가장 많은 보수를 획득한 전략이 우승자가 된다. 2개 대회 모두 우승자는 ‘tit for tat(맞대응)’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호혜성(reciprocity)에 기반한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 우선 협력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의 대응방식에 따라 맞대응하는 것, 즉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상대가 배신하면 나도 배신으로 보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보복이 두려워 협력할 유인이 생긴다. 이 전략이 우승한 이유는 상대를 무찔러서가 아니라, 여러 상대로부터 가장 많은 협력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이었다. 협력행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지속될 때 지금의 배신에 대한 다음의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상호작용할 기회가 없이 흩어져 있는 개인들로부터는 협력이 생길 수 없다. 작은 무리라도 이루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만 하면 호혜성에 기반하여 협력은 창발된다. 따라서 Axelrod는 협력이 번성하기 위한 핵심요건으로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협력이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할 것. 둘째, 호혜주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미래의 그림자가 충분히 클 것. 현재에 드리우는 미래의 그림자를 키우는 방법 중의 하나는 상호작용이 보다 오래 지속되도록 하고 서로 더 자주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존속하는 다층적인 조직으로 한데 묶거나, 중요한 상호작용을 덜 중요한 작은 상호작용으로 쪼개는 것이 있다. 이는 미래의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빈도를 증가시키고, 현재의 배반으로서 얻는 이익이 앞으로 남은 전체 상호작용에서 얻을 이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게 만들어 협력의 안정성을 증가시킨다. 결국, 협력은 호혜주의로부터 생기고, 호혜주의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부터 생긴다. 따라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사회구조(예를 들어, Putnam의 ‘시민참여의 네트워크’)만 형성되면 호혜성에 기반하여 협력은 창출된다. 나아가 Axelrod는 이러한 호혜성의 효과는 서로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간접적인 평판을 통해서도 작용한다고 본다. Nowak(2011: 51-68)은 ‘tit for tat’ 전략의 호혜성을 직접적 호혜성이라 칭하고, 평판을 통한 호혜성을 간접적 호혜성이라 칭하며 후자에 대한 게임 실험을 통해 평판이 협력을 위한 강한 촉진제가 됨을 입증했다. 이리하여 그는 간접적 호혜성의 작동을 위해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게임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사람들 사이의 지속적인 직접·간접의 상호작용은 균형적 호혜성에 기초한 협력을 낳는다. 그런데 이러한 맞대응 식의 균형적 호혜성은 협력의 필요조건이긴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양자 간의 균형적 호혜성에 기반한 협력의 유인책은 다수의 행위자들과 공공재를 포함하는 다자간의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다자간의 상황에서는 무임승차의 유혹이 생겨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공공재의 생산에 기여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Keohane(1986)의 국제정치적 시각을 반영한 호혜성의 효과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 내에서 협력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람들은 구체적(균형적) 호혜성을 넘어 포괄적 호혜성에 연루되어야 한다. 이기주의에 기초한 구체적 호혜성은 원시사회에서건 국제사

회에서건 갈등을 제한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기주의자들조차도 그들이 사회적 교환에 연루된다면 최소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과거에 그들이 받은 것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교환관계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사적 이익에 기초한 구체적 호혜성은 사회적 교환과정의 ‘되풀이되고 점차 확대되는 특성’으로 인해 상호 경험에 근거한 신뢰를 발생시킬 수 있다. 즉 연쇄적인 채권채무의 존재는 장기적으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 호혜성에 의한 거래가 지속되면 포괄적 호혜성의 작동을 위한 적합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교환은 동시적이기 보다 연쇄적으로(sequentially) 발생해야 한다. 만일 동시적 교환만 일어난다면 협력이나 합의는 별로 생겨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쟁점들은 종종 연속적이어서 어떤 주어진 시간에 적절한 맞대응 수단을 찾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동시교환에서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교환은 어떤 순간에도 균형적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동시적인 교환은 종종 신뢰의 붕괴를 반영한다. 어쨌든, 포괄적 호혜성의 실행자는 협력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 까닭에, 포괄적 호혜성의 패턴은 오직 사회에 널리 퍼진 의무감(sense of obligation)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 강한 의무감이 부재한 상태에서 포괄적 호혜성은 그 실행자를 착취의 위협에 노출시킨다. 이 경우, 구체적 호혜성이 그 치유책이 될 수 있다. 구체적 호혜성은 국제관계에서처럼 의무규범이 약할 때의 적절한 행위원칙이다. 이렇게 구체적/포괄적 호혜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들의 관계는 선형적이 아니라 변증법적이다. 구체적 호혜성은 무정부 상태에서 협력이 생겨나게 할 수 있고 포괄적 호혜성이 발전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호혜성은 거래관계를 제한하고, 다자간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양자관계에서조차 불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포괄적 호혜성은 불필요한 갈등의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착취의 위협에 노출된다. 둘 중 어느 호혜성도 완전히 만족적이지 않다면,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봐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혹은 교환관계는 균형적 호혜성 내지 포괄적 호혜성을 생성하고, 이러한 호혜성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의 기반이 된다. 사실 포괄적 호혜성의 기능은 이러한 호혜성(도움, 관용성, 노블레스 오블리즈 등)이 결여된 사회를 상상하면 쉽게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나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는 우선 타인과의 상호작용 네트워크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참여가 연계를 낳고, 연계가 네트워크나 결사체를 낳고, 네트워크나 결사체활동은 호혜성을 낳고, 호혜성은 신뢰나 협력을 낳고, 신뢰나 협력은 민주주의나 경제의 발전을 낳기 때문이다. 사실 Putnam의 ‘시민참여의 네트워크’ 개념 내지 사회자본론은 이러한 논리구조 속에 있다고 여겨진다. 그의 사회자본은 “개인들 사이의 연계(connections),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2000: 19)” 혹은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1993a: 167)”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Putnam이 참고하고 있는 Sahlins의 포괄적 호혜성 개념에 의거 부산시민들의 도움활동, 관용성, 노블레스 오블리즈의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과연 시민참여의 네트워크가 이러한 포괄적 호혜성을 창출하는지를 분석한다.

Ⅲ. 조사방법과 분석방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자본론의 시각에서 시민참여의 네트워크는 호혜성을 창출하는 근원이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기능은 그 종류에 따라 그리고 동일한 네트워크도 특정 사회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까닭에, 구체적인 네트워크들의 효과는 경험적 연구의 과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시민참여 및 호혜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시민참여 네트워크가 역시 다양한 유형의 호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조사대상변수의 선정과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과 분석방법 등을 소개한다.

1. 변수의 선정과 측정방법

1) 독립변수: 사회참여와 정치참여

사회참여의 지표인 자원결사체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대상인 자원결사체의 종류는 2005-2006 세계가치조사의 문항들을 기초로 하고,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 연고단체들을 추가해서 다음의 15가지를 선정했다: 종교단체, 스포츠·취미·친목단체, 예술·문화단체, 교육·학부모단체, 아파트나 지역의 주민단체, 시민운동단체, 인권·자선단체, 노조, 직업단체, 정당,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사이버단체(카페, 블로그, SNS 등), 기타 단체. 그리고 이에 대한 측정은 2005-2006주기 세계가치조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참여의 강도를 반영하기 위해 ‘①참여 없음’, ‘②소극적 참여(이름만 올려둠)’, ‘③적극적 참여(실제로 활동함)’의 3점 척도를 구성했다.

정치참여의 측정을 위해서는, 정치참여를 우선 관습적 정치참여와 비관습적 정치참여 영역으로 대별한 뒤, 이들 각 영역을 대표하는 참여유형 및 참여형태들을 선정했다. 관습적 정치참여는 Verba & Nie(1972, 46-47) 및 Dalton(2008, 32-53)을 참고해서 투표참여, 선거활동, 공공활동, 사적 접촉 및 사이버 정치참여로 유형분류한 뒤, 이들 5개 유형을 대표하는 참여형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투표참여는 그 참여대상을 중앙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선거)로 대별하여, 이에 대해 ‘①매번 투표한다’, ‘②대부분 투표한다’, ‘③가끔 투표한다’, ‘④전혀 투표하지 않는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한다. 그리고 선거활동은 ‘공직선거에서 타인에게 투표권유’, ‘공직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활동’, ‘공직선거와 관련된 집회나 단체 참여’, ‘정치헌금 기부’ 등 4개 활동; 공공활동은 ‘국가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활동’, ‘국가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자나 공공기관 접촉(방문, 편지 등)’, ‘정치나 시사 관련 토론회나 설명회 참석’, ‘공공기관 주최의 공청회나 위원회 참석’ 등 4개 활동; 사적 접촉은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나 공공기관 접촉(방문, 편지 등)’의 1개 활동; 사이버 정치참여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정치참여나 선거운동’의 1개 활동을 선정해서, 그 활동 정도에 대해 각각 ‘①전혀 없다’, ‘②몇 번 있다’, ‘③많이 있다’의 3점 척도로 측정한다. 한편, 비관습적 정치참여란 통상 정치항의(political protest)를 말한다. 이 영역의 참여활동은 Barnes, Kaase et al.(1979: 57-81)의 연구를 참고로 ‘탄원이

나 진정서 서명’, ‘공과금 납부 거부’, ‘불매운동’, ‘집회나 시위’, ‘파업이나 태업’, ‘교통방해’, ‘건물 점거나 농성’ 등 7가지 활동을 선정했다. 그런데 정치향의는 일상적인 정치상황에서 그리 흔한 현상은 아니다. 따라서 많은 조사연구(Barnes, Kaase et al. 1979; World Values Survey; 박종민 1995; 류태진 2013)에서는 정치향의의 경험과 아울러 그 의향 즉 향의 잠재성(protest potential)을 함께 측정해왔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감안해 정치향의에 대해서는 ‘①참여할 의향이 없다’, ‘②참여할 의향이 있다’, ‘③참여한 경험이 있다’의 응답지로 정치향의의 경험 및 의향을 측정한다.

2) 종속변수: 호혜성

호혜성은 Putnam이 사회발전과 정치발전을 위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포괄적 호혜성’을 측정한다. 위에 소개한 Sahlins에 따르면 포괄적 호혜성의 징표는 “공유”, “친절”, “공짜 선물”, “도움”, “관용”, “노블레스 오블리츠” 등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츠는 오히려 포괄적 호혜성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그 핵심은 투철한 도덕의식과 공공정신이라 할 수 있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도움활동, 관용성, 도덕의식 및 공공정신을 측정하기로 하며, 측정문항은 2005-2006 세계가치조사의 문항(V198-V201), 김태준 등(2009)의 설문조사 문항(A12 (4)-(10)), Onyx & Bullen(2000)의 설문항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했다.

도덕의식의 측정은 ‘자격이 없는데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것’, ‘대중교통의 무임승차’, ‘기회가 된다면 탈세하는 것’, ‘주는 돈을 자기가 갖는 것’ 및 ‘뇌물을 주거나 받는 것’의 5개 문항에 대해 각각 리커트 형 10점 척도로 측정한다. 도움활동은 ‘헌혈한 적이 있다’, ‘공공장소에서 남이 버린 쓰레기를 주는 적이 있다’, ‘불우이웃 돕기를 한 적이 있다’ 및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다’의 4개 문항에 대해 각각 ‘①많이 있다’, ‘②몇 번 있다’, ‘③전혀 없다’의 3점 척도로 측정한다. 관용성에 대해서는 ‘사회는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반대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지지하지 않는 정부가 만든 정책은 꼭 따를 필요가 없다’의 3개 문항, 공공정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 ‘부정부패를 목격해도 나에게 손해가 안되면 모른체 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질서를 지치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의 3개 문항을 설정하고 각각 리커트 형 5점 척도로 측정한다.

3) 통제변수

독립변수 시민참여가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종속변수 호혜성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시민의 참여 혹은 불참여의 주요 영향요인이라고 간주되는 변수들을 선정해서 회귀분석 시 이들을 통제변수로 도입하고자 한다. Putnam(2000: 283-284)은 미국의 시민참여 쇠퇴의 주된 원인을 시간과 돈의 압박, 도시의 팽창과 장거리 출퇴근, TV 시청 및 전자오락 몰두, 세대교체 등 4가지로 간주한다. 한편 Verba & Nie(1972)는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지위(SES) 즉 직업, 교육 및 수입을 들고 있으며, 그 외에 매개적인 요인들로서 성별이나 연령 혹은 인종과 같은 사회적 변수, 정치관심이나 정치성향과 같은 태도변수, 그리고

독특한 사회적 상황이나 제도 또는 지역환경 등의 환경변수를 거론하고 있다. 이를 참조해 본 조사연구에서는 직업, 교육수준, 가구월수입, 성별, 연령, 정치관심, 이념성향, 정당성향, 지역만족도 등의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도입한다. 그러나 사전에 통제변수들을 확정하지 않고, 다중회귀분석 과정에서 유의한 변수들만을 선정해 분석에 활용한다. 통계적 분석작업은 가급적 적은 수의 변수를 사용하여 인과관계의 핵심을 간결하게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김두섭·강남준 2008: 32). 독립변수, 종속변수 및 통제변수의 유형, 변수명, 척도범위를 아래 <표 1>에 정리해둔다.

<표 1> 측정변수

영역	유형	변수명 (개수)	척도범위	
독립 변수: 시민 참여	사회 참여	표출적 단체	'스포츠·취미·친목단체', '예술·문화단체' (2)	3점
		도구적 단체	'시민운동단체', '인권·자선단체', '노조', '직업단체', '정당' (5)	3점
		도구표출적 단체	'종교단체', '교육·학부모단체', '지역 주민단체' (3)	3점
		연고단체	'동창회', '향우회', '중친회' (3)	3점
		기타	'사이버단체', '기타 단체' (2)	3점
	정치 참여	투표참여	'중앙선거 투표', '지방선거 투표' (2)	4점
		선거활동	'투표권유', '선거돕기 활동', '선거집회 참여', '정치헌금' (4)	3점
		공공활동	'공적 단체활동', '공적 접촉(방문, 편지 등)', '정치토론회 참여', '공청회 참여' (4)	3점
		사적 접촉	'사적 접촉' (1)	3점
		사이버 정치참여	'사이버 정치참여(인터넷이나 SNS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 (1)	3점
정치향의	'진정서 서명', '공과금 납부 거부', '불매운동', '집회나 시위', '파업이나 태업', '교통방해', '건물점거나 농성' (7)	3점		
종속변수: 호혜성	도덕의식	'무자격 국가혜택', '무임승차', '탈세', '주은 돈 갖기', '뇌물수수'(5)	10점	
	도움활동	'헌혈', '쓰레기 줍기', '불우이웃 돕기', '자원봉사' (4)	3점	
	관용성	'극단주의불허', '반대주장불용', '비지지 정부의 정책불수용' (3)	5점	
	공공정신	'안볼 때 법질서 무시', '무관한 부정부패 무시', '법질서 지키면 손해' (3)	5점	
통제변수	사회경제	직업, 교육수준, 가구월수입, 성별, 연령 (5)		
	태도변수	정치관심, 이념성향, 정당성향 (3)		
	환경변수	지역만족도 (1)		

2. 자료수집방법

조사대상 지역은 부산광역시를, 표본추출은 비례층화표집법을, 자료수집은 설문지의 배포수거방법을 택했다. 우선, 20세 이상 부산시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전체 표본수를 1,240명으로 정하고, 부산시 16개 구·군(15개 구, 1개 군)의 인구비례에 따라 각 구·군별로 14개 동씩 모두 31개 동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각 동에서 1개 통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 각 통별로 40명씩을 연령별·성별 비례에 따라 표본수를 할당하였다.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해당 동장의 협조 하에 해당 통장을 만나 조사방법을 교육한 후, 통장들이 성별·연령별 할당비율에 의거 자기 통의 주민을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서를 배포한 후 수거하도록 했다. 2013년 6월 5일-7월5일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율이 낮거나 할당비율이 왜곡된 지역에 한해 7월 22일-31일 추가조사를 하였다. 이리하여 회수된 전체 설문지 1,235매 중 답변이 부실한 31매를 제외하고 1,204매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3. 분석방법

우선,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참여 및 호혜성 관련 측정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경험적인 유형분류를 시도한다. 다음으로, 기술통계를 통해 요인분석으로 분류된 시민참여 및 호혜성의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다. 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시민참여 유형들이 호혜성 유형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요인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의 구체적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요인분석

(1) 시민참여

① 사회참여

사회참여를 측정하기 위한 15개 변수들 중 성격이 불분명한 ‘기타 단체’ 및 ‘사이버단체’를 제외하고 전체 13개 변수를 투입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4개의 고유값 1.0 이상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아래 <표 2>에 의거 각각의 요인을 살펴보면, ‘도구적 단체’ 요인에 시민운동단체, 인권·자선단체, 노조, 직업단체, 정당 등 5개; ‘연고단체’ 요인에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 3개; ‘도구-표출적 단체’ 요인에 종교단체, 교육·학부모단체, 지역 주민단체 등 3개; ‘표출적 단체’ 요인에 스포츠·취미·친목단체, 예술·문화단체 등 2개 변수가 적재되었다. 이를 근거로 13개 자원결사체들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각 요인(유형)의 요인점수들을 추후 다중회귀분석 시 활용하기로 한다. 한편, 요인분석 결과를 놓고 볼 때, 본 조사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Gordon & Babchuk(1959)의 자원결사체들에 대한 잠재적 구조 분류는 경험적으로 타당성을 가진다.

<표 2> 13개 자원결사체의 요인분석 결과

측정변수 \ 성분	도구적 단체	연고 단체	도구-표출적 단체	표출적 단체	표준화된 신뢰계수 α
노조	.840	.092	.012	.075	.837
인권자선단체	.761	.140	.276	.164	
시민운동단체	.756	.147	.348	.151	
직업단체	.730	.175	-.166	.156	
정당	.580	.332	.300	-.106	
향우회	.247	.830	.128	.043	.754
종친회	.189	.803	.212	.009	
동창회	.092	.679	-.105	.377	
종교단체	.001	.020	.722	.081	.604
지역주민단체	.175	.283	.696	.151	
교육학부모단체	.266	-.013	.567	.396	
취미친목단체	.031	.210	.112	.796	
예술문화단체	.226	.014	.265	.747	.622
고유값	2.982	2.110	1.798	1.613	-
설명된 분산(%)	22.941	16.228	13.831	12.411	-

KMO 측도: .84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5043.385(p=.000)

② 정치참여

정치참여 관련 전체 19개 변수를 투입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사적 접촉’이 ‘공적 접촉’과 함께 공공활동 요인에 묶였다. 참조한 Verba & Nie(1972)의 연구에서는 ‘사적 접촉’이 별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던 바, 이와 달리 나타난 것이다. 조사대상 집단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상 사적 접촉은 공공활동과는 이질성이 있어, 이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18개 변수를 투입하여 다시 요인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5개의 고유값 1.0 이상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각의 요인을 살펴보면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활동’ 요인에 4개, ‘과격항의’ 요인에 5개, ‘선거활동’ 요인에 5개, ‘온건항의’ 요인에 3개, ‘투표활동’ 요인에 2개 변수가 적재되었으며, 특히 변수 ‘사이버 정치참여’(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정치참여나 선거운동)는 ‘선거활동’ 요인에 적재되었다. 이를 근거로 18개 정치참여 형태들을 5가지 정치참여 유형으로 분류하며, 각 요인(유형)의 요인점수들을 추후 다중회귀분석 시 활용한다.

<표 3> 18개 정치참여형태의 요인분석 결과

측정변수	성분	공공활동	과격항의	선거활동	온건항의	투표참여	표준화된 신뢰계수 α
공청회참여		.837	.023	.182	.063	.072	.843
정치토론회참여		.776	.110	.245	.056	.030	
공적접촉		.756	-.019	.288	.070	.082	
공적단체활동		.708	.076	.342	.132	.071	.807
접근농성		.086	.864	.048	.039	.032	
교통방해		.073	.862	.088	.069	-.001	
파업태업		-.049	.725	.128	.341	-.035	
공과금거부		.106	.536	-.016	.428	-.112	.772
선거돕기활동		.249	.063	.825	.030	.018	
선거집회참여		.313	.048	.776	.011	.042	
투표권유		.131	-.076	.630	.266	.225	
사이버정치참여		.237	.226	.533	.079	-.076	
정치헌금		.378	.139	.507	-.018	.055	.718
불매운동		-.001	.249	.101	.802	.055	
진정서서명		.176	.058	.037	.768	.039	
집회시위		.046	.494	.194	.591	.034	.879
지방선거투표		.112	-.026	.061	-.001	.931	
중앙선거투표		.072	-.010	.074	.071	.930	
고유값		2.827	2.713	2.599	2.002	1.832	-
설명된 분산(%)		15.704	15.072	14.438	11.123	10.179	-

KMO 측도: .83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8642.707(p=.000)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2) 포괄적 호혜성

포괄적 호혜성 관련 전체 15개 측정변수를 투입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헌혈’은 공통성이 낮아 일단 제외했다. 나머지 14개 변수를 투입하여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고유값 1.0 이상의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아래 <표 4>에서 보듯이 ‘도덕의식’ 요인에 5개,

‘도움활동’ 요인에 3개, ‘관용성’ 요인에 2개, ‘공공정신’ 요인에 3개 변수가 적재되었다. 그런데 측정변수 ‘극단주의 불허’는 조사설계 시에 관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도입했으나, 요인 분석결과 별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서술의 편의를 위해 아래의 조사결과분석에서는 이를 제외하기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요인에 각각 적재된 13개 변수들을 묶어 4가지 호혜성 유형 변수(도덕의식, 도움활동, 관용성, 공공정신)를 생성하며, 추후 다중회귀분석 시 이들 4가지 유형 변수들의 측정치는 모두 표준화하여 사용한다.

〈표 4〉 14개 포괄적 호혜성 측정항목의 요인분석 결과

측정변수	성분	도덕의식	도움 활동	관용성	공공정신	극단주의 불허	표준화된 신뢰계수 α
탈세		.817	.025	-.094	-.055	.155	.820
무자격국가혜택		.791	.004	-.094	.100	.044	
뇌물수수		.790	-.001	-.102	-.111	.135	
무임승차		.776	.007	-.036	.036	-.021	
주은 돈 갚기		.617	-.046	.260	-.219	-.175	
불우이웃돕기		.022	.877	-.036	.028	.044	.754
자원봉사		-.013	.803	-.064	.070	.068	
쓰레기줍기		-.005	.755	.074	.011	-.153	
반대주장 불용		-.066	-.014	.865	.039	.092	.731
비지정정부의 정책 불수용		-.046	-.031	.804	.176	.130	
무관한 부정부패 무시		-.058	.098	.352	.775	-.154	.645
법질서 지키면 손해		-.025	.013	-.088	.724	.372	
안 볼 때 법질서 무시		-.093	.061	.550	.608	-.287	
극단주의 불허		.129	-.032	.182	.023	.860	-
고유값		3.171	2.323	2.012	1.123	1.003	-
설명된 분산(%)		22.647	16.590	14.372	8.021	7.164	-

KMO 측도: .72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4698.606(p=.000)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2) 다중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9가지 시민참여 유형들이 주요 매개변수들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순수하게 4가지 호혜성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회귀모형은 4가지 호혜성 유형 각각을 종속변수로, 9가지 시민참여 유형들 모두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통제변수로는 직업, 교육 수준, 가구월수입, 성별, 연령, 정치관심, 이념성향, 정당성향, 지역만족도 등을 도입한다. 다만 이들 통제변수들 중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은 다중회귀분석 시 후방제거법(backward elimination)을 사용해 제거하고, 유의한 변수들만 선정해 그 회귀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각 회귀모형은 아래와 같은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절편, 회귀계수 생략).

$$\text{각 유형별 호혜성} = \text{도구적 단체} + \text{표출적 단체} + \text{도구} \cdot \text{표출적 단체} + \text{연고단체} + \text{공공활동} + \text{과격항의} + \text{온건항의} + \text{선거활동} + \text{투표참여} + \text{통제변수} + \epsilon$$

IV. 조사결과분석

1. 시민참여 현황

1) 사회참여

사회참여의 유형별 및 종류별 측정결과를 아래 <표 5>에 소개해 두고, 여기에서는 ‘적극적 참여(실제로 활동함)’만을 사회참여자로 간주해 그 현황을 살펴본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단체에 가입만 하고 활동하지 않는 상태는 참여로 간주하지 않는다.⁴⁾ 말하자면 동창회(명부)에는 졸업만 하면 저절로 참여되기 때문이다.

아래 <표 5>에서 보듯이 자원결사체의 유형별로는 표출적 단체 참여율(18.6%)이 가장 높고 도구적 단체 참여율(5.0%)이 가장 낮은 가운데, 도구·표출적 단체(12.8%) 및 연고 단체(12.8%) 참여율이 유사하게 그 중간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모든 유형의 평균 참여율은 12.3%로서, 부산시민의 자원결사체 참여율은 그리 높지 않다.

<표 5> 자원결사체 참여율

단위: 명(%)

유형	종류	참여 없음	소극적 참여 (이름만 등재)	적극적 참여 (실제 활동함)	합계
표출적 단체	취미친목단체	315(26.4)	537(45.1)	339(28.5)	1191(100)
	예술문화단체	621(52.3)	462(38.9)	104(8.8)	1187(100)
	합계	468(39.4)	500(42.0)	222(18.6)	1189(100)
도구· 표출적 단체	종교단체	511(42.7)	497(41.6)	188(15.7)	1196(100)
	교육학부모단체	707(59.9)	363(30.7)	111(9.4)	1181(100)
	지역주민단체	657(55.1)	375(31.5)	160(13.4)	1192(100)
	합계	625(52.6)	412(34.6)	153(12.8)	1190(100)
도구적 단체	시민운동단체	922(77.7)	210(17.7)	55(4.6)	1187(100)
	인권자선단체	906(76.1)	225(18.9)	59(5.0)	1190(100)
	노조	967(81.8)	169(14.3)	46(3.9)	1182(100)
	직업단체	789(66.7)	296(25.0)	98(8.3)	1183(100)
	정당	973(83.2)	157(13.4)	39(3.3)	1169(100)
	합계	911(77.1)	211(17.9)	59(5.0)	1182(100)
연고 단체	동창회	464(39.1)	489(41.2)	233(19.6)	1186(100)
	향우회	799(67.3)	280(23.6)	109(9.2)	1188(100)
	중친회	765(64.8)	303(25.7)	113(9.6)	1181(100)
	합계	676(57.1)	357(30.1)	152(12.8)	1185(100)
총계		670(56.5)	370(31.2)	147(12.3)	1186(100)

4)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12: 496. (www.kosis.kr)

2) 정치참여

정치참여의 유형 중 정치향의는 여타 유형의 정치참여와는 달리 참여의 경험(행위)뿐만 아니라 의향(태도)을 측정한 까닭에, 정치참여는 관습적 정치참여와 비관습적 정치참여(정치향의)로 나누어 소개한다.

(1) 관습적 정치참여

관습적 정치참여의 유형들에는 투표참여, 선거활동 및 공공활동이 포함된다. 투표참여는 ‘① 매번 투표한다’, ‘① 대부분 투표한다’, ‘② 가끔 투표한다’, ‘③ 전혀 투표하지 않는다’⁵⁾의 리커트 형 4점 척도, 그리고 선거활동과 공공활동은 그 활동경험에 대해 ‘① 전혀 없다’, ‘① 몇 번 있다’, ‘② 많이 있다’의 3점 척도로 측정했다. 측정결과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기술통계를 통해 측정치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소개한다.

아래 <표 6>에 의거 백분위 평균값을 살펴보면, 투표참여의 평균값은 76.67점으로 투표참여의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활동의 평균값은 12점으로 낮은 편이며, 여기에서 투표권 유활동(25.5점)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활동들의 평균값은 8.88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공공활동의 평균값은 9.5점으로 역시 낮다. 즉 관습적 정치참여 활동 중 투표참여의 수준은 높은 편이나, 여타 활동들에 대한 참여수준은 매우 낮다.

<표 6> 관습적 정치참여 수준

유형	종류	평균	백분위 평균	척도범위
투표참여	중앙선거투표	2.39	79.67	0-3
	지방선거투표	2.21	73.67	
	합계	2.30	76.67	
선거활동	투표권유	.51	25.5	0-2
	선거돕기활동	.21	10.5	
	선거집회참여	.21	10.5	
	정치헌금	.15	7.5	
	사이버선거운동	.14	7.0	
	합계	.24	12.0	
공공활동	공적단체활동	.23	11.5	0-2
	공적접촉	.19	9.5	
	정치토론회참여	.16	8.0	
	공청회참여	.19	9.5	
	합계	.19	9.5	

5) 응답지 앞의 숫자는 분석 시의 코딩 점수로서 설문지의 응답번호와는 다름. 이하 같음.

(2) 비관습적 정치참여: 정치향의

정치향의에 대해서는 ‘① 참여할 의향이 없다’, ‘①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② 참여한 경험이 있다’의 응답지로 정치향의의 경험과 함께 의향을 측정했기에, 평균값을 소개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도수분포를 소개한다. 아래 <표 7>에 의거 정치향의의 경험만을 살펴보면, 온건향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9.0%, 과격향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2.3%로서 매우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정치향의 참여경험자의 비율은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매우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표 7> 정치향의 참여율

단위: 명(%)

구분		의향 없다	의향 있다	경험 있다	합계
온건향의	진정서서명	496(41.4)	501(41.9)	200(16.7)	1197(100)
	불매운동	633(52.9)	495(41.4)	68(5.7)	1196(100)
	집회시위	854(71.4)	286(23.9)	56(4.7)	1196(100)
	합계	661(55.2)	427(35.7)	108(9.0)	1196(100)
과격향의	공과금거부	900(75.0)	270(22.5)	30(2.5)	1200(100)
	파업태업	993(82.9)	177(14.8)	28(2.3)	1198(100)
	교통방해	1068(89.2)	104(8.7)	25(2.1)	1197(100)
	점거농성	1088(90.7)	83(6.9)	28(2.3)	1199(100)
	합계	1012(84.5)	159(13.2)	27(2.3)	1198(100)

2. 포괄적 호혜성 현황

포괄적 호혜성은 도움활동, 도덕의식, 관용성 및 공공정신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도움활동은 리커트 형 3점 척도, 도덕의식은 10점 척도, 그리고 관용성 및 공공정신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측정결과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측정치의 평균값을 소개한다.

아래 <표 8>에 의거 백분위 평균값을 살펴보면, 도움활동은 50.5점, 도덕의식은 84.33점, 관용성은 61점, 그리고 공공정신은 65.8점을 기록하고 있다. 즉 도덕의식이 매우 높고, 도움활동, 관용성 및 공공정신의 수준은 보통 정도라 할 수 있다.

<표 8> 포괄적 호혜성 수준

유형	종류	평균	백분위 평균	척도범위
도움활동	쓰레기줍기	1.10	55.0	0-2
	불우이웃돕기	1.04	52.0	
	자원봉사	.89	44.5	
	합계	1.01	50.5	
도덕의식	무자격국가혜택	7.71	85.67	0-9
	무임승차	7.33	81.44	
	탈세	8.07	89.67	
	주은 돈 갖기	6.70	74.44	
	뇌물수수	8.13	90.33	
	합계	7.59	84.33	

관용성	반대주장 불용	2.45	61.25	0-4
	비지지정부의 정책 불수용	2.42	60.50	
	합계	2.44	60.88	
공공정신	안 볼 때 법질서 무시	3.09	77.25	0-4
	무관한 부정부패 무시	2.90	72.50	
	법질서 지키면 손해	1.91	47.75	
	합계	2.63	65.83	

3. 시민참여의 포괄적 호혜성에 대한 영향 분석

여기서는 시민참여 유형들이 포괄적 호혜성 유형 각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직업, 교육수준, 가구월수입, 성별, 연령, 정치관심, 이념성향, 정당성향, 지역만족도 등의 통제변수들을 독립변수들과 함께 한꺼번에 투입해서 회귀분석한 다음 후방제거법을 통해 유의하지 않은 통제 변수들을 제거시켜나간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가구월수입의 4가지 변수가 남게 되었다. 이들 4가지 변수를 통제변수로, 9가지 시민참여 유형들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4가지 호혜성 유형 각각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4가지 회귀모형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각 회귀모형의 검정통계량(F)은 모두 유의확률 $p < .001$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들로 판명되었으며,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래 <표 9>에 제시한 결정계수(R^2) 및 표준회귀계수(베타)를 중심으로 각 호혜성 유형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 소개한다.

<표 9> 시민참여 유형들의 포괄적 호혜성 유형에 대한 영향분석

영향요인 \ 호혜성	도덕의식	도움활동	관용성	공공정신
공공활동	-.004	.169***	.017	.048
선거활동	-.001	.145***	.020	-.042
투표참여	.069*	.146***	.080*	.109**
온건항의	.087**	-.051	.092**	.025
과격항의	-.085**	.009	-.126***	-.125***
도구적단체	-.145***	.081**	-.071*	.017
도구표출적단체	-.078*	.177***	-.081*	.045
표출적단체	-.014	.149***	.015	.028
연고단체	-.060	.030	-.064	.049
성별(여자=0)	-.010	-.097**	.032	-.037
연령	.155***	-.018	-.075	.082*
교육수준	.106**	.078*	.137***	.087*
가구월수입	.050	-.010	.085**	.078*
F	6.180***	17.764***	9.820***	5.745***
R^2	.075	.185	.112	.069

* $p < .05$ ** $p < .01$ *** $p < .001$

① 도덕의식

도덕의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모형의 분석결과, 결정계수 R^2 은 .075로서 회귀선의 설명력은 7.5%이다. 독립변수들의 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온건향의(.087) 및 투표참여(.069)가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격향의(-.085), 도구적 단체(-.145) 및 도구표출적 단체(-.078)가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온건향의 활동이나 투표참여가 활발할수록 도덕의식이 높아지나, 과격향의나 도구적 단체 및 도구·표출적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도덕의식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유형의 시민참여 네트워크가 도덕의식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도덕의식을 저하시키는 단체활동도 있다. 또한 과격향의와 온건향의는 모든 호혜성 유형에 대한 영향관계가 상반될 정도로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 과격향의활동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어떤 부당한, 따라서 비도덕적인, 대우(배신)에 대한 맞대응(배신)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격향의 참가자들은 오히려 도덕의식에 대한 냉소주의를 공유할 수 있다. 한편, 도구적 단체는 조직활동을 수단으로 하여 조직외부를 대상으로 어떤 특수한 이익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이다. 혹시 소속단체의 특수이익이나 가치추구 성향이 회원들의 도덕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명확한 해석을 하기가 힘들다. 어쨌든 도구적 단체 활동은 도덕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하나의 사실로 나타났다. 한편 도구·표출적 단체 활동도 역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그 영향력의 크기는 도구적 단체 활동의 약 절반이다.

호혜성의 영향요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통제변수들의 영향력도 살펴보기로 한다. 통제변수들의 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연령(.155)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106)이 높을수록 도덕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도덕의식은 공동체의식과 관련되는 까닭에 젊은이들의 상대적으로 강한 개인주의 성향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덕의식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서 도덕의식에 대한 교육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② 도움활동

도움활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모형의 분석결과, 결정계수 R^2 은 .185로서 회귀선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높다. 독립변수들의 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공공활동(.169), 선거활동(.145), 투표참여(.146), 도구적 단체(.081), 도구·표출적 단체(.177), 표출적 단체(.149)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참여활동이 도움활동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격향의활동이나 연고단체활동도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그 영향의 방향은 긍정적이다. 다만 온건향의활동만이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의아심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구체적인 활동 3가지를 분리해서 회귀분석을 해보았다. 아래 <표 10>에서 보듯이, 온건향의 유형을 구성하는 진정서 서명, 불매운동 및 집회시위의 3가지 구체적 활동종류 중 오직 불매운동이 도움활동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도움활동에 인색하다. 그러나 불매운동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참여활동은 도움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최소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도움활동에 대해 특

히 도구·표출적 단체, 표출적 단체 및 공공활동의 영향력이 높은 것에 주목한다.

한편,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성별(-.097)이 부정적 영향을 그리고 교육수준(.078)이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남자 보다 여자가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움활동이 활발하다.

〈표 10〉 온건항의 종류별 ‘도움활동’에 대한 영향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공공활동	.144	.027	.170***	5.412	.000	
과격항의	.018	.028	.021	.621	.535	
선거활동	.123	.024	.150***	5.061	.000	
온건항의	진정서서명	-7.472E-05	.027	.000	-.003	.998
	불매운동	-.059	.030	-.072*	-2.000	.046
	집회시위	.008	.033	.009	.236	.813
투표참여	.122	.025	.151***	4.893	.000	
도구적단체	.066	.025	.081**	2.702	.007	
도구표출단체	.144	.026	.176***	5.452	.000	
표출적단체	.120	.024	.148***	5.042	.000	
연고단체	.024	.025	.029	.935	.350	
성별(여자=0)	-.161	.050	-.099**	-3.221	.001	
연령	-.001	.002	-.019	-.510	.610	
교육수준	.060	.027	.079*	2.255	.024	
가구월평균수입	-.003	.012	-.008	-.258	.797	
F	15.544***					
R ²	.186					

* p<.05 ** p<.01 *** p<.001

③ 관용성

관용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모형의 분석결과, 결정계수 R²은 .112로서 회귀선의 설명력은 11.2%이다. 독립변수들의 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온건항의(.092) 및 투표참여(.080)가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격항의(-.126), 도구적 단체(-.071) 및 도구·표출적단체(-.081)가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온건항의 활동이나 투표참여가 활발할수록 관용성이 높아지나, 과격항의 활동이나 도구적 단체 및 도구·표출적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관용성은 저하된다. 이러한 영향관계는 앞에서 살펴본 도덕의식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것이 특징적이다. 영향력의 크기는 다르나, 도덕의식의 경우에도 동일한 유형의 네트워크 활동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교육수준(.137)과 가구월수입(.085)이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수준은 여전히 호혜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구월수입은 도덕의식이나 도움활동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관용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공공정신

공공정신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모형의 분석결과, 결정계수 R^2 은 .069로서 회귀선의 설명력은 6.9%이다. 독립변수들의 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투표참여(.109)가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격항의(-.125)가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투표참여는 결국 모든 유형의 호혜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과격항의는 도움활동에만 유의한 관계가 없을 뿐 여타 모든 유형의 호혜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투표참여는 하나의 공공적 의무인 까닭에 투표참여 의무에 투철할수록 일반적인 공공정신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 지난 20여년간 과격항의활동을 유발한 주요 요인은 낮은 정부신뢰도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류태건 2013: 65), 과격항의 참여자들의 낮은 정부신뢰도가 공공정신 저하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여타 독립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선거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보아 시민참여는, 과격항의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공공정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연령(.082), 교육수준(.087)과 가구월수입(.078)이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연령, 교육수준 및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공공정신이 높아진다.

V. 결론 및 논의

연구대상인 시민참여와 포괄적 호혜성은 모두 다양한 양상을 가진 복합적인 현상이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조사자료분석을 바탕으로 시민참여 영역을 우선 사회참여와 정치참여로 대별한 뒤 사회참여는 도구적 단체, 표출적 단체, 도구·표출적 단체 및 연구단체의 4가지 유형, 정치참여는 공공활동, 과격항의, 온건항의, 선거활동 및 투표참여의 5가지 유형, 그리고 포괄적 호혜성은 도움활동, 도덕의식, 관용성 및 공공정신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기술통계를 통해 시민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백분위 값으로 환산할 때 사회참여는 12.3점, 그리고 정치참여는 수년 주기로 한번 행해지는 투표참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의 참여수준이 12점을 기록해, 부산시민의 참여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포괄적 호혜성의 수준을 백분위 값으로 환산하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움활동 50.6점, 도덕의식 84.3점, 관용성 61점, 그리고 공공정신 65.8점으로서, 도덕의식 수준이 높은 가운데 여타 유형의 호혜성 수준은 보통 정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황을 배경으로, 이제 시민참여가 호혜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해 논의해본다.

우선 이들의 영향관계 분석을 통해 발견한 사실은 모든 유형의 시민참여 네트워크가 포괄적 호혜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개중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다는 것이다. 9가지 시민참여 유형들의 4가지 포괄적 호혜성 유형에 대한 영향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과격항의활동은 도덕의식, 관용성, 공공정신 등 3가지 유형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도구적 단체 및 도구·표출적 단체(참여)는 공히 도덕의식과 관용성 2가지 유형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민참여 유형들은 4가지 포괄적 호혜성 유

형에 대해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유의한 영향력이 없다. 특히 과격항의(참여경험자 2.3%)의 간헐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를 논외로 한다면, 시민참여가 호혜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오직 도구적 단체와 도구·표출적 단체의 도덕의식과 관용성에 대한 경우뿐이다. 따라서 시민참여는 전반적으로 보아 포괄적 호혜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도구적 결사체 유형은 구체적으로 시민운동단체, 인권·자선단체, 노조, 직업단체 및 정당을 포함하고 있고, 도구·표출적 결사체 유형은 종교단체, 교육·학부모단체 및 지역주민단체를 포함하고 있어, 이들 두 가지 유형은 사회참여 영역의 주요 단체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러한 단체들에 참여하는 것이 도덕의식과 관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미국, 독일 및 스웨덴의 102개 자원결사체들을 대상으로 한 Stolle and Rochon(1998: 58, 61)의 조사연구에서도, 공적 사회자본 측정 영역 중 관용성과 도덕의식⁶⁾은 결사체의 회원과 비회원 사이의 차이가 가장 작은 영역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특히 집단적 권리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결사체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자원결사체들 중 특히 문화단체, 즉 표출적 결사체가 일반신뢰와 공공기관신뢰를 위시한 모든 공적 사회자본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arren(2001: 149-155)은 호혜성과 신뢰와 같은 시민덕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어서, 엘리트단체, 신사회운동단체, 인종단체, 애국자단체 등 영합(zero-sum)적인 차별성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과 대립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들은 시민덕성을 계발시키지 않고; 사교모임, 스포츠단체, 오락단체, 문화단체, 교육·연구단체, 대학, 공립학교 등은 시민덕성을 증진시키며; 정당, 직업단체, 로비단체, 노조, 인권단체 등은 시민덕성을 손상시키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시민덕성의 학교” 구실을 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표출적 성격의 단체들은 시민덕성을 증진시키나, 도구적 성격의 단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류석춘 등(2008: 231-232)의 동창회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내 조사연구에서는, ‘보답의 즉각성’과 ‘보답의 등가성’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동창회는 균형적 호혜성에 가깝고, 시민단체는 균형적 호혜성과 부정적 호혜성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Lin(2001: 55-77)은 이론적 차원에서, 표출적 상호작용은 강한 유대(strong tie)와 관련이 있고 도구적 상호작용은 약한 유대(weak tie)와 관련이 있으며, 강한 유대는 강한 친밀감, 호혜성, 상호 의무로 특징지어지고 약한 유대는 덜한 친밀감, 적은 의무감, 그리고 약한 상호봉사로 특징지어진다고 본다. Lin의 이러한 이론적 견해 역시 도구적 단체나 도구·표출적 단체의 포괄적 호혜성 수준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존연구들을 참고해볼 때 도구적 단체나 도구·표출적 단체의 ‘도구성’ 즉 단체활동을 도구화하여 어떤 특수한 이익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이 회원들에게 균형적 호혜성(합리적·경제적 교환) 성향을 강화시켜 도덕의식이나 관용성과 같은 포괄적 호혜성의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조사연구 결과 드러난 또 한 가지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잠시,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을 돌이켜 살펴본다. 가구월수입은 관용성과 공공정신에 유의한 긍정적 영

6) 관용성은 국외자(outsider)나 소수자(marginalized people)에 대한 관용성, 그리고 도덕의식은 탈세나 대중교통의 무임승차에 대한 견해를 측정함.

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경제수준이 높아지면 이러한 유형의 포괄적 호혜성이 고양된다고 볼 수 있다. 연령은 도덕의식과 공공정신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주나 연령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교육수준은 4가지 모든 호혜성 유형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도 크다. 본 조사연구를 근거로 주장하자면, 시민들의 포괄적 호혜성을 고양시키는 확실한 방법은 교육이다.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위해 교육체제와 교육내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글을 마치며, 지역 차원의 사례연구라 일반화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며, 한편 자원결사체 연구에 있어서 그 도구적, 표출적 성격에 따른 효과의 차이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참고문헌

- 김두섭·강남준. (2008). 『회귀분석-기초와 응용』. 나남.
- 김병준. (1994). 『한국지방자치론-지방정치·자치행정·자치경영』. 서울: 법문사.
- 김태준 등. (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류석춘·왕혜숙·박소연. (2008).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신뢰 비교연구-동창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동양사회사상 제17집: 203-269.
- 류태건. (2013). “한국사회 정치향의 변화추이와 영향요인 분석.”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3집 2호: 47-73.
- 박영도. (2007). “민주적 인륜성과 시민참여: 이론적 고찰과 개념적 제안.” 『시민들의 사회참여와 시민공동체』. 백산서당.
- 박종민. (1995). “정치향의 사회심리적 조건.” 『한국정치학회보』 29집 1호, 377-396.
- 박희봉. (2006). “시민참여와 로컬 거버넌스.”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2호: 1-23.
- 박희봉·이희창·강제상·임명수·김상진·노병렬·전지용·김태순·서승현. (2009). “불신에서 신뢰로: 사회참여와 정치제도가 신뢰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4호: 1271-1300.
- 배귀희·임승후. (2009). “정부신뢰가 공식적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4호, 1421-1447.
- 성경룡·박준식·정동일 편저. (2012). 『지역창조의 사회학: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소화.
- 심영희. (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
- 윤상철. (2007). “지역시민들의 사회참여 유형과 성격.” 『시민들의 사회참여와 시민공동체』. 백산서당.
- 이소정·정경희·이윤경·유삼현. (2007).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승중. (1993).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삼영.
- 주성수. (2006).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 통계청. (2012). 『한국의 사회지표』. www.kosis.kr.
- Arnstein, S.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American Institute for Planning*, July.
- Axelrod, Robert. (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 _____. (2006).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revised edition). New York: Basic Books.
(Robert Axelrod. 이경식 옮김. 2009. 『협력의 진화. 이기적 개인의 틱포탯 전략』. 시스테마.)
- Barnes, Samuel H., Max Kaase et al. (1979).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Burt, Ronald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8). “The Gender of Social Capital.” *Rationality and Society*. 10(1): 5-46
- Campbell, D. E. (2004). *What you do depends on where you are: community heterogeneity and participation*. Presented at Annu. Meet. Mid-West Polit. Sci. Assoc. Chicago.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_____. (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Dalton, Russell J. (2008). *Citizen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Washington: CQ Press.
- Delhey, J. and K. Newton. (2005). “Predicting Cross-national Levels of Social Trust: Global Pattern or Nordic Exceptionalism?”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1(4): 311-327.
- Gordon, C. Wayne and Nicholas Babchuk. (1959). “A Typology of Voluntary Associ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 22-29.
-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_____.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481-510.
- Held, David. (2006). *Models of Democracy*. London: Polity Press. (David Held. 박찬표 역. 2012. 『민주주의의 모델들』. 후마니타스.)
- Huntington, S. P. & Nelson J. M. 김학준 역. (1981). 『정치참여의 논리와 현실-개발도상국가의 어려운 선택』. 일조각.
- Inglehart, Ronald. (1999). “Trust, Well-being and Democracy.” pp. 88-120 in *Democracy and Trust*. M. E. Warren(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ohane, Robert O. (1986).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0: 1-27.
- Levi, M. (1996). “Social and Unsocial Capital. A Review Essay of Robert Putnam’s Making

- Democracy Work.” *Politics & Society*. 24(6): 45-55
- _____. (1998). “A State of Trust.” pp. 77-101 in *Trust and Governance*. V. Braithwaite and M. Levi(ed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Lin, Na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an Lin. 김동윤·오소현 역. 2008. 『사회자본』. 커뮤니케이션북스.)
- Loury, Glenn. (1992).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Getting to the Core of the Problem.” *Harvard Journal for African American Public Policy* 1.
- Milbrath, L. W. & M. L. Goe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 Mill, J. S. (1910). *Utilitarianism, Libert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London: Dent.
- Muller, Edward N. (1982). “An Explanatory Model for Differing Types of Participat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10.
- Newton, Kenneth. (1999).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Established Democracies.” in Pippa Norris(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2): 201-214.
- _____.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575-586.
- Nowak, Martin A. and Roger Highfield. (2011). *Supercooperators: Altruism, Evolution, and Why We Need Each Other to Succeed*. New York: Free Press.
- Onyx, Jenny & Paul Bullen. (2000). “Measuring Social Capital in Five Communitie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6(1).
- Ostrom, Elinor.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strom, Elinor & James Walker(eds.). (2003). *Trust and Reciprocity*.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Pateman, Carole. (1970).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xton, Pamela. (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nited State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88-127.
- _____. (2002).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2): 254-277.
- Portes, Alejandro.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1): 1-24.
- Putnam, R. D. (1993a). *Mar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안청시 외 역. 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 _____. (1993b).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35-42.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정승현 역. 2009. 『나 홀로 볼링』. 페이퍼로드.)
- Putnam, Robert D. and Lewis M. Feldstrin. (2003). *Better Together: Restoring the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Rothstein, B. (2005). *Social Traps and the Problem of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lamon, Lester M. and Helmut K. Anheier. (1997).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A Cross-national Analysis*. Manchester: Manchester.
- Salamon, Lester M. (1999). *America's Nonprofit Sector: A Primer 2nd Edition*. Foundation Center. (Lester M. Salamon. 이형진 역. 2000. 『NPO란 무엇인가』. 아르케.)
- Sahlins, Marshall. (1972). *Stone Age Economics*. Chicago: Aldine-Atherton.
- Sills, David L. (1968). "Voluntary Associations: Sociological Aspects." David L. Sills(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6.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 Stolle, Dietlind. (2009). "Social Capital." in R. J. Dalton & H.-D. Klingemann(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Clubs and Congregations: The Benefits of Joining an Association." pp. 202-244 in *Trust in Society*. K. Cook(ed.).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Stolle, D. and Rochon, T. R. (1998). "Are all associations alike?: Member diversity, associational type, and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 47-65.
- Tarrow, S. (1996). "Making Social Science Work across Space and Time: A Critical Reflection on Robert Putnam's Making Democracy Work."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0: 389-397.
- Theiss-Morse, Elisabeth and John R. Hibbing. (2005). "Citizenship and Civic Engagement."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8: 227-249.
- Tocqueville, Alexis de. (1981). *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 Paris: Flammarion. (임효선·박지동 역. 1997. 『미국의 민주주의』. 한길사.)
- Tocqueville, Alexis de. (1984). *Democracy in America*. Renewed by Richard D. Heffner.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A Division of Penguin Books.
- van der Meer, Tom W. G., Manfred te Grotenhuis and Peer L. H. Scheepers. (2009). "Three Types of Voluntary Associa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Importance of Studying Associational Involvement through a Typology of Associations in 21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Civil Society* 5(3): 227-241.
-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_____, Norman H. Nie, and Jae-on Kim. (1978).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A Seven-Nation Comparis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arren, Mark E. (2001). *Democracy and Associ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Wessels, Berhard. (1997). "Organizing capacity of societies and modernity." In Jan W. van Deth. *Private Groups and Public Life*. London: Routledge.

Woolcock, Michael.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151-208.

류태건(柳泰建): 1989년 프랑스 그르노블 정치대학(I.E.P. de Grenoble)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정치사상사이나, 근래의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및 정치행태이다. 『유교의 자연과 인간』(세종출판사 2002), 『정치학으로의 산책』(한울 아카데미 2009. 공저), 『지방자치의 이해-한국 지방자치제도를 중심으로』(부경대학교 출판부 2012) 등의 저서와 “정치효능·정치신뢰·정치참여의 이론과 현실”(지방정부연구 2010) 등의 논문들이 있다(tgyoo@pknu.ac.kr).

Abstract

Relation between Citizen Participation and Reciprocity in View of Social Capital Theory: An Analysis of the Results of a Survey of the Citizens of Busan

Yoo, Taegun

In the social capital theory, citizen participation is regarded as not only a component of social capital but also a source of its another component, 'generalized reciprocity'. On this theoretical viewpoint,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s of citizen participations on generalized reciprocity on the base of a survey performed on July 2013 for the citizens of Busan. For the first step of analysis, citizen participation is classified in two sectors, soci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each with 4 and 5 types, and generalized reciprocity is classified in 4 types. Results of analysis show as follows. Radical political protest has negative effect,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on three types of generalized reciprocity, moral conscience, tolerance and public spirit. Instrumental voluntary association and instrumental-expressive voluntary association have in common negative effect on two types of generalized reciprocity, moral conscience and tolerance. Except these cases, all the 9 types of citizen participation have in general positive effects on 4 types of generalized reciprocity, to conclude that citizen participation promote by and large generalized reciprocity.

Key Words: social capital, participation, reciprocity, Busan

